



## '25년 청년정책 339개 사업(28조원) 확정

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

- ▲ '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, ▲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,
- ▲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, ▲ '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등 6건 심의·보고

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(수) 10시,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'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'를 주재했다.

\* 참석자: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, 이영 민간 부위원장, 정부위원, 민간위원 등 총 35인

- 이날 위원회에서는 ①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, ②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, ③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, ④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, ⑤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(안), 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.

※ (붙임1) 안건별 세부내용

### (1)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

□ 일자리, 주거, 교육, 생활, 참여·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,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.

-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서 ▲ 중앙부처(5천명) 및 공공기관(2.1만명)의 청년인턴 선발, ▲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(4.8만명 → 5.8만명)을 추진한다.
- ▲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121개)에서 대학 졸업후 '쉬는 청년'을 찾아내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, ▲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(9천명 → 1.2만명), ▲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(2년간 480만원) 등 사업도 추진한다.

-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▲**창업중심대학을 확대**(9개→11개)하고  
▲**청년창업펀드를 조성**(600억원 규모)하며, 판로지원을 위해 ▲**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**(2천만원→5천만원) 등을 추진한다.
- 주거분야에서는 ▲**공공분양주택·공공임대주택** 등 총 11.7만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하고, ▲**청년주택드림통장**으로 청약 당첨시 ‘**청년주택드림대출**’(신설)로 분양가 80%까지 장기(최대 40년)·저리(최저 2%)로 지원하며, ▲**청년대상 전세대출**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(2→3억원)와 대출한도(1→2억원)를 확대하였다.
- 교육분야에서는 ▲**대학생의 국가장학금** 수혜대상 확대(8→9구간 이하, 100→150만명), ▲**근로장학금** 수혜인원도 대폭 늘렸으며(14→20만명), ▲**이공계 석·박사 5만여명**에 대한 **연구생활장려금 신설** 등을 추진한다.
- 생활·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 
▲**청년도약계좌**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확대(월 최대 2.4→3.3만원)하고,  
▲**장병내일준비적금**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확대(월 40→55만원)하며,  
▲**고립·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**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.
- 한편,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▲**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**(‘온통청년’)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, ▲**청년신문고**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.

## (2)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

-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**자립준비청년**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.
- ▲**고립·은둔, 연락두절** 등 위기상태에 놓인 **자립준비청년**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‘**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**’의 위기정보를 추출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**자립지원전담기관**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,

- ▲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,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, ▲ 현재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나, 올해 하반기부터는 ‘정부24’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한편, 청소년복지시설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.
- \* 자립지원수당 :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(월40→50만원)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(월50만원 신설) 등

### (3)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

- 정부는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 및 취·창업, 연구·학문, 공공외교,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바,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.
- ▲ AI·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, ▲ 청년들이 국제기구·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또한 ▲ 온·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, ▲ 해외취업 교육 제공, ▲ 정착 지원금 지급 확대, ▲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, ▲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·과전,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.

### (4)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

- 2025년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‘대한민국 청년총회’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.
-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청년정책 홍보,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 수렴과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명사 특강, 멘토링, 문화행사를 융합하여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발굴·개선에 대한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,
- 참여자는 청년인재 DB,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블로그·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전 모집한다.

## (5)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(안)

-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(221→227개)하여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“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1~’25)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(‘23.3)을 통해 일자리·주거·교육·생활·복지·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”라고 말하면서,
  - “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,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6~’30)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- 한편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 개최에 앞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발된 15명의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,
  - 청년들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.

※ (붙임2)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

담당부서 <총괄> <안건3·6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	책임자	과 장	유경호 (044-200-1981)
		담당자	사무관	안혜리 (044-200-1985)
<안건1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	책임자	과 장	김민성 (044-200-6323)
		담당자	사무관	신용현 (044-200-6326)
<안건2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	책임자	과 장	김정아 (044-200-63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은경 (044-200-1989)
<안건4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	책임자	팀 장	최영수 (044-200-6332)
		담당자	사무관	이 솔 (044-200-6335)
<안건5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	책임자	과 장	유경호 (044-200-1981)
		담당자	사무관	김문현 (044-200-1984)

**안건1**

**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**

- 35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'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, 주거, 교육, 생활·복지·문화, 참여·권리 5개 분야 339개 과제, 총 28.2조원 예산으로 이루어졌다.
  - **일자리** 분야의 경우 청년들이 원하는 **일경험 프로그램**을 **민관협업** 기반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, **청년창업기업**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.
    - 구체적으로는 **미래내일일경험** 지원 대상을 확대(4.8만명 → 5.8만명)하며 직무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. **공공기관 청년인턴**은 청년이 선호하는 채용형 인턴을 확대(3.3→4천명)한다. **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**은 보다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**연령 하한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.**
    -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**졸업생 특화프로그램** 시범운영(8개교)을 올해부터 본격 확대하여 쉬는 청년을 방지하고 진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한다. **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**는 작년 53개 대학에서 운영대학을 64개교로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늘렸다. **자신감이 결여된 구직단념 청년**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**청년도전지원사업**도 작년에 비해 3천 명 확대(9천명→1.2만명)하여 지원한다.
    -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**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**을 확대하여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    - 이와 함께 **창업중심대학**을 기존 9개에서 11개 대학으로 확대하고, **청년창업펀드**를 667억원 규모(목표)로 조성하는 등 청년창업기반을 구축한다. **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** 위해 국가계약시 수의계약 한도를 우대(2천만원 →5천만원 이하)하였으며,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지자체 공공계약시에도 판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.**
  - **주거** 분야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**청년층 뉴:홈 공공분양주택** 공급을 '24년 5.8만호에서 6.7만호로 확대하고, 우수입지 중심으로 **공적임대주택**도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갈 예정이다.

- 또한, **청년 대상 전세대출**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여 지원대상(전세보증금 2→3억원 이하)과 대출한도(1→2억원)를 확대하였고, 원거리로 통학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**주거안정장학금**을 최초로 지급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작년에 도입한 **청년주택드림통장**을 저소득층 지원계좌까지 연계되도록 개선하고, 청약 당첨시 분양가 80%까지 최대 40년간 최저 2% 금리로 대출해주는 '**청년주택드림대출**'을 올해 출시하여 청약 당첨 청년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.
- **교육** 분야는 대학생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국가장학금**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(100→150만명)하였으며, **근로장학금**은 수혜 인원을 기존 14만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면서 **교외근로 확대**를 통해 양질의 직무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- 또한,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**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**(RISE :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)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인재양성 - 취·창업 -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.
- **생활·복지·문화** 분야는 청년의 자산형성기회를 확대하고,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. **청년도약계좌**의 월 최대 정부 기여금을 3만 3천원까지 확대하고,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기여금 일부(60%)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.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**장병내일준비적금**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게 책정하여 자산형성을 돕는다.
- 또한, **자립준비청년**이 자립을 미리 준비하도록 **보호종료 전부터 자립 지원 프로그램**을 확대하고, **가족돌봄청년** 및 **고립·은둔청년** 발굴과 지원을 위한 **청년미래센터**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- **참여·권리**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지정된 **청년친화도시**(서울 관악구, 부산진구, 경남 거창군)를 지원하면서, 신규 청년친화도시를 발굴하는 등 청년 친화적 지역기반을 확산할 예정이다.
- 새롭게 개편된 **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**(온통청년)에서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한다. 특히, **청년신문고**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.
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\* 등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‘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’을 논의하였다.
  - \* 아동복지시설, 위탁가정 등에서 아동기 및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, 연령 도래(18세)에 따라 사회진출을 해야하는 청년으로 약 1만명 규모
- 정부는 2019년 자립수당을 도입한 이래 두 차례 종합대책\*을 통해 소득, 주거, 교육, 취업, 전담기관 설치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.
  - \* 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 지원강화 방안(21.7월),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(22.11월)
- 그 결과, ‘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’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월소득, 대학 진학률, 고용률 등 주요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나,
  - 연락두절, 고립·은둔 등으로 인해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년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해왔다.
-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,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유사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.
  - 먼저, 위기상태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, ‘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’을 통한 위기정보\*를 추출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,
    - \* 필수 인프라 이용내역(단전·단수·단가스), 통신비체납, 건보료체납 등 16종
  - 이를 통해 발굴된 청년에게는 통합사례관리\*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.
  - \* 집중 지원 필요시 월 1회 상담 및 생활주거취업의료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
  - 배달앱과 같은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정보를 활용하여 고립·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,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,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출국 시에도 자립수당을 끊기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고, 사유증빙 등을 위한 서류 종류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며,

-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**보호종료확인서**는 기존 오프라인 발급방식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)에서 벗어나 정부24를 통해 **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.**
- 또한, 자살 고위험군,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고난이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,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돕기 위해,
  - 고난이도 대상자 대응 사례관리, 단계적 접근 및 대처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\*이다.
- \* '(가칭)자립지원 통합사례관리업무 매뉴얼' 연구용역 추진('25.上)
- 민간 기업, 대학 등과의 협력\*도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보다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고,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나갈 예정이다.
  - \* (23년) IBK기업은행, 삼성전자DS사회공헌단 ('25년) 일성아이에스, KB국민은행 등 업무협약 지속 추진
- 청소년복지시설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.
  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,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며,
    - 개인 사정 등으로 청소년쉼터 등에 재입소할 경우 지급이 정지된 자립지원수당을 퇴소후에도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.
  - 또한,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퇴소자립지원금 또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.
  - 유사 시설 퇴소 청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(퇴소자립지원금)이 제외되고,
    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은 근로소득도 60만원 선공제 받을 수 있다.
  -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역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과 유사시설 퇴소 청년이 자립의 길에서 또래와의 출발점 차이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민관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

- 정부는 청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·창업, 연구·학문, 공공외교,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,
  - 앞으로 첨단기술분야, 국제개발협력 등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인재 수요 및 청년들의 요구에 따른 해외진출 전단계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청년들이 반도체, AI 등 미래 산업 핵심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공계인재의 미국 주요 대학 파견, 석·박사급 청년 인재의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고
  - 초격차·신산업, K-뷰티 등 유망 분야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AI 특화 프로그램 신규 도입, 창업사관학교 내에 K-뷰티 글로벌 트랙 신설(50개사) 등 지원을 확대한다.
  - 그 외에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(JPO) 파견기간 확대(최대 3년) 및 공공외교 직무경험 기회 확대, KOICA 프로젝트 봉사단의 성과지향적 운영 강화 등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한다.
- 한편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준비부터 교육·파견,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.
  - 청년정책 통합플랫폼(온통청년) 및 전국 224개 청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정책정보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,
  - K-Move 스쿨에 참여자 어학·직무능력에 따른 단기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정착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(가구소득 6분위 이하→8분위 이하)하는 등 교육·파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
  - 사업 참여 이후에도 해외 직무경험 등을 직무능력은행에 등록·관리하여 참여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「청년정책 시행계획」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한편,
  - 향후 청년정책 심층분석 평가를 통해 청년과 운영기관 등 현장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- 2025년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‘대한민국 청년총회’를 운영한다. 청년기본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,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표 및 멘토링, 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.
- 올해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연 5차례 내외로 개최된다. 경기·강원, 충청, 전라, 경상 등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일자리, 주거, 교육 등 청년 정책 발굴·개선에 대한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  - **매회 100~150명 내외의** 청년 참여자들이 참석하게 되며, 참여자는 청년인재DB,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블로그·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전 모집한다.
  - 총회에서는 청년정책 홍보, 의견수렴과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명사 특강, 멘토링, 문화행사를 융합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흥미를 높이고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.
 

- ① **(정책홍보·의견수렴)** 우수 정책 투표 이벤트 등 청년정책 홍보·소개 추진, 중앙 부처 2030자문단-참여 청년 간 청년정책 아이디어·개선사항 의견수렴
    - ② **(명사 특강)** 사회·경제·문화 등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의 현장 강연
    - ③ **(멘토링)** 취업·마음건강 등 청년세대가 관심 있는 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
    - ④ **(문화행사)** 청년 예술인 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등 개최
- 일자리, 주거, 교육 등 청년총회 개최 과정에서 논의된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사항은 관계부처로 전달되어 정책 환류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. 또한, 청년 아이디어의 정책반영 여부 등 연간 청년총회 운영 성과와 청년 참여제도 활용 우수사례는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한다.
  - 대한민국 청년총회의 행사 주요 내용은 SNS 콘텐츠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후 확산하고, 주요 우수사례는 ‘온통청년(www.youthcenter.go.kr)’에 게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.

□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(안)을 심의하였다.

※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(23.12.)를 통해 221개 위원회를 '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'로 지정하였으나 폐지·신규위원회 등에 대해 제외 및 추가 지정 검토

□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, 정부위원회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44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년위원 의무 위촉(민간위원의 10% 이상)이 적합한지 검토하였고,

○ 그 결과,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218개 위원회를 제외한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가 의무화된다.

\*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회

1호(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): 중앙징계위원회 등 156개 위원회

2호(외교·국방·안보정책과 관련):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10개 위원회

3호(행정기관 내부업무 처리):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1개 위원회

4호(그외-당연직 구성 또는 위촉권자 지정 등): 이북5도위원회 등 31개 위원회

□ 한편 소관 정책이 청년과 밀접하여 특히 청년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'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'로 지정하여 민간위원의 30%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.

\* 청년정책조정위원회,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,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, 양성평등위원회,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국가산학협력위원회

□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른 '청년 의무위촉 예외 위원회' 및 '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'는 관보 및 온통청년 등에 고시된다.

○ 정부는 청년위원 위촉실적을 매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-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을 마련하였다.
  - \*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
- 이번 개정(안)은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및 타법의 개정사항을 운영세칙에 반영하고 그 외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.

연번	이름	학력 / 주요경력	비고
1	이영 (여, 만55세) *부위원장	▶ (現)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 ▶ (前)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제21대 국회의원	
2	김성준 (남, 만34세)	▶ (現)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▶ (現)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	
3	김요한 (남, 만51세)	▶ (現) 지역과 인재 대표 ▶ (前)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과장(개방형직위)	신규 위촉
4	김율 (여, 만31세)	▶ (現)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 대표 ▶ (現) (사)관악공동체라디오 진행자	신규 위촉
5	김진희 (여, 만46세)	▶ (現)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▶ (現) 교육부 국제개발협력평가위원회 위원	신규 위촉
6	김현동 (남, 만26세)	▶ (現)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 연구원 ▶ (現) 교육부 학자금심의위원회 위원	
7	박민혁 (남, 만31세)	▶ (現) (주)스토리요 CTO ▶ (現)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	신규 위촉
8	박이슬 (여, 만38세)	▶ (現)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대외협력이사 ▶ (現)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	신규 위촉
9	배소현 (여, 만30세)	▶ (現) 전략컨설팅집현(주) 선임연구원 ▶ (前)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교통네트워크 위원	신규 위촉
10	석예은 (여, 만31세)	▶ (現) 경남하나센터 사원 ▶ (現) 통일부 2030자문단	신규 위촉
11	송원섭 (남, 만25세)	▶ (現) CITYNET SECRETARIAT, Junior Program Officer ▶ (前)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민연구단	신규 위촉
12	이설 (남, 만32세)	▶ (現) 주식회사 스노우볼 대표 ▶ (現)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	신규 위촉
13	이성환 (남, 만28세)	▶ (現) 대한공중보건 의사협회 회장 ▶ (現) 부안군보건소 공중보건 의사	신규 위촉
14	이종승 (남, 만28세)	▶ (現) 포스코교육재단 교사 ▶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	신규 위촉
15	장창훈 (남, 만36세)	▶ (現)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관리실 선임검사역 ▶ (前)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회 위원	
16	정창원 (남, 만36세)	▶ (現) 정창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▶ (現)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	신규 위촉
17	최용석 (남, 만41세)	▶ (現) 창업진흥원 차장 ▶ (現) 세종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	신규 위촉
18	한예진 (여, 만27세)	▶ (現)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재학 ▶ (前)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활력제고 특별위원회 위원	신규 위촉
19	황채영 (여, 만25세)	▶ (現) 광주 각화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▶ (現)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	신규 위촉